靑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팔아라"

중앙 부처 750명중 248명이 다주택…3주택 이상 52명
송철호·이철우 등 시·도지사는 4명…매각 이행 '관심'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의 2주택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실거주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하라"고 나서면서 해당 다주택 인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참모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칼을 빼들었고, 청와대 노영민 수석 등 일부 인사들도 서둘러 주택 매각을 약속하고 있다.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청와대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등 두 채를 신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부처 장관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다주택자였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재산공개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난 만큼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수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충북 청주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해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집을 남겨뒀다"는 비난을 산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 외에도 솔선수범의 뜻으로 주택 일부를 처분한 공직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한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북 영천 다가구주택과 울산 중구 아파트를,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각각 신고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한다"며 "정확한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부동산 처분 솔선수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비서실장 "반포 아파트 팔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청주 집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 노 실장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이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판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가 팔리면 당분간 무주택자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당, 야당몫 부의장도 거부

"법사위 빠지면 의미 없어"…정보위·인사청문회 차질

미래통합당이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덩달아 국회 정보위원회장 선임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다만 "야당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여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 "그건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일축했다.

공석인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부의장 문제와 무관하다"며 "국회의장실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내정자인 정진석 의원도 이날 의총장을 퇴장하며 기자들에게 "부의장을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고, 원내지도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송갑석,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8일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에서 할인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점검, 파악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송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민생입법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하청업체 부당 특약 무효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8일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특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이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하지만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해당 특약 체결 책임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의 계약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로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강은미,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 설치 결의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급격한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할 책무를 있음을 밝히고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 없는 탈탄소 사회 실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에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을 위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 등을 후속 조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